

4.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의 예상 효과

- (배경)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북미 제네바 핵합의 이행 촉구와 우리 신정부의 햇볕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
- (전망) 남북 관계와 더불어 핵합의 이행이나 미군 유해 송환 협상 등 정치 현안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,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등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로 제재 완화 조치 발표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도 있음
- (예상 조치와 효과) 예상되는 조치는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조치 해제 및 북한 관련 금융 거래 허용, 미 해외 현지 법인의 대북 투자 허용 및 선박·항공기의 북한 입국 허용, 전략 물자를 제외한 대북 수출입 허용의 품목 확대 및 증액 등임. 북한의 대외 개방 촉진 및 경제난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

□ 정치·경제적 배경

- (개요) 김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간의 경제 교류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
 - 현재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무역, 투자, 원조(인도적 지원 제외) 금지가 주 내용(<부표> 참조)으로 수출관리법, 적성국 교역법 등의 6개 국내법과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
 - 95년 초 비상업 분야(체육, 학술, 문화 등)와 인도적 분야, 통신·정보, 상무부 허가 하의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등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단행
- (정치적 배경) 북미, 남북 관계의 조화 병행 원칙의 일정 후퇴, 신정부의 햇볕론 반영
 - 미국은 그동안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북미 및 남북 현안 문제와 연계시켜 왔음
 - 서남아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편승 행위 차단, 북미 제네바 협정의 이행 촉구
 - 북한내 온건파의 입지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어 대외 개방을 유도함
 - 북한의 고립·붕괴정책→포용·연착륙 유도정책, 흡수 통일→평화·안정 주력
- (경제적 배경) 정경 분리 원칙 하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 개방 유도 정책 의지 반영
 - 심각한 북한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 증대, 그동안의 경제 제재 효과 무용론 대두

□ 제재 완화 전망

- 남북 관계 및 북미간 정치 현안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
 - 북미간에는 제네바 핵합의 이행, 테러 포기 및 지원 금지, 미사일 협상과 상호연

락사무소 개설, 미군 유해 송환 협상 등의 정치 현안이 상존

- 그러나 최근의 국제 환경 변화로 완화 조치 발표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
 - 인도, 파키스탄의 핵실험 편승 우려, 북한의 핵 연료봉 봉인 작업 중단 등

□ 예상 조치와 효과

-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조치 해제 및 미국 은행의 북한 관련 금융 거래 허용
 - 미국내 북한 자산은 최대 1,400만 달러 규모이나, 이미 대부분 서방 채권단의 담보로 되어 있어 실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함. 반면 상징적 효과는 큼
- 미 해외 현지 법인의 대북 투자 허용, 선박·항공기의 북한 입국 허용
 - 경제특구 중심으로 SOC와 금융, 광물개발 부문, 특히 선점 효과가 큰 통신과 에너지(美스탠턴그룹이 전력, 정유공장 기진출) 부문의 투자 확대가 예상됨
 - 전략 물자를 제외한 대북 수출입 허용 품목 확대 및 증액
- 북한의 대외 개방 촉진 및 경제난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
 -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지지와 북미 관계 개선 → 북미간 무역 확대 → 대북 진출 희망 기업의 투자 위험 축소 → 외자 유치 확대 및 북일 청구권(50~100억 달러) 협상 가시화 → 외화난과 경제난 해소에 큰 도움 예상

(홍 순 직 sjhong@hri.co.kr ☎724-4051)

<부표>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현황

주요 제재 조치 내용	관련 근거	제재 변경 절차
-대북한 물자 수출 금지 단, 홍보자료와 기본 인도적 물자는 수출 가능	수출관리법	행정부 정책 사항 (상무부)
-대북한 금융 거래 금지 및 북한 자산 동결 단, 비정치적 목적 여행, 홍보 자료 및 인도적 물자, 수출입 목적 금융 거래는 가능	적성국 교역법 (외국자산 통제규정) 수출입은행법 등	행정부 정책 사항 (재무부)
-대북한 무기 금수	국제 무기 거래 규제법	행정부 정책 사항 (국무부)
-국제 테러 지원 국가로서 교역, 防産 물품 판매, 수출입은행 보증 금지 ·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 반대	수출관리법 등	행정부 정책 사항 (국무부)
-공산국가로서 최혜국 대우, 원조, GSP, 수출입은행 지원 금지	교역법, 대외원조법 등	의회의 법 개정 필요
-미사일수출통제(MTCR)규정 위반 국가로서, 防産 물자 수출입 금지	위반국 수출관리법 등	행정부 정책 사항 (국무부)